

## 건약 2012년 여름

### 여는 글

- 3 시대의 과제를 실천하는 건약 | 신형근

### 건약상반기활동

- 5 약자지결 #4  
9 상반기 활동 소개

### 이슈

- 11 약사법 개정에 따른 변화와 우리의 방향 | 천문호  
17 사람의 목숨도 돈벌이 수단으로 하자고? | 정형준

### 포커스

- 22 벼랑 끝에 몰린 유럽위기, 시민의 눈으로 보자 | 김병권  
32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 장호종  
50 의료생협과 약국 | 오민우

- 60 신임 집행부 인사  
정동만/리병도

- 62 지부소식  
광전지부/대경지부/울산지부

건약 2012년 여름

회원소식

65 신입회원 10분 10답

6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의 새로운 시작 | 신주영

쉬어가기

71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을 읽고서 | 송해진

74 위그든씨의 사탕가게 | 김미영

76 노찾사 콘서트 '우리 지금, 여기에'를 다녀와서 | 김태원

## 시대의 과제를 실천하는 건약

회장 신 형 근



4월11일 총선 결과를 보고 다수의 사람들이 멘붕의 경험을 하였다. 그 멘붕의 상태를 극복하기도 전에 통합진보당 사태가 5월 정국을 강타하였고 나름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연거푸 혼란과 실망의 경험을 하였다.

사태초기에 수습할 수도 있었던 상황은 사태가 꼬이고 꼬여서 이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으며 통합진보당 관련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더불어 진보정당의 성장과 정착이 힘들어 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보수정당 중심의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 사태로 호기를 맞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극우단체들은 소위 당권파로 불리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라 지칭하면서 시절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고 사정당국은 공안정국으로 몰고 갈 것인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 더불어 임수경 의원의 막말 논란을 종북과 연결시키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문제와 제주 강정의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고 MBC 노조의 투쟁도 모르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아래에서 계속 제기하지 않으면 해결이 난망할 것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통합진보당이 저렇게 망가진 상황에서 진보의 의제를 어떻게 구현하고 쟁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총선에서 보았듯이 보수층이 멍치면 그 파워가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였고 진보 개혁진영이 다수의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선도 힘들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다. 대선을 어떻게 치르고 어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는 출마하는 인물과 그 정당이 제시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다짐이다.

MB정권을 지나면서 많은 시민사회운동이 약화되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영역에서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지금껏 건약은 시대의 과제를 구현해 내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실천해 왔던 단체이다. 남들이 어떤 상황이든 남들의 생각이 어떤가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관여하였던 과제를 잘 수행해가고 같이 연대하였던 단체들과 계속 손 붙잡고 나아가는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건약은 시대의 과제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할 때도, 놀 때도,  
나른할 때도 에너지 드링크(?)

- 고(高) 카페인 음료에 중독되는 청소년들

작년(2011년) 8월 세계 1위의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상륙하면서 ‘핫시스’, ‘번인텐스’, ‘몬스터에너지’ 등 카페인을 다량 함유한 드링크가 어느새 우리 생활에 파고들어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에너지 드링크의 시장 규모는 작년 8월 대비 연말에 300% 상승하였으며, 롯데칠성의 ‘핫시스’ 매출도 작년 대비 466% 상승하는 등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다. 이는 동네 편의점의 음료 수 코너를 살짝만 둘러보아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미 에너지 드링크들은 우리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잡아서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끊임없이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에너지 드링크는 에너지를 높여서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직장인들은 평상시는 물론 술을 덜 취하게 하기 위해 술과 섞어 마시기도 한다. 심지어 중고생들은 시험 기간에는 10병도 마신다는 소식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이 음료들은 고함량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로서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함량 카페인 음료를 물 마시듯이 자주 마셔도 괜찮은 것일까?

카페인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적당한 카페인 섭취는 졸음을 줄여주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하며,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면이 일부 있어 카페인은 의약품의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의약품 오남용시 부작용을 동반하듯 이 카페인 역시 과잉 섭취하게 되면 불면증, 신경과민, 집중방해, 메스꺼움, 속쓰림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고함량의 카페인 섭취는 극심한 흥분, 떨림, 심한 심장 박동 증가 등이 나타난다. 게다가 지속적인 카페인 섭취는 카페인 중독으로 이어져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가 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불면증이 1.9배, 기상시 피로감은 1.8배로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rbeta et al, 2006). 이미 2008년 미국과 독일에서는 고함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드링크에 대해 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경고 표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카페인의 일일 섭취량을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통상 체중 50kg 청소년은 125mg으로 권장하고 있다. 에너지 드링크 한 캔(250~473ml)에는 62.5 ~ 164mg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한 두병만 마셔도 청소년의 경우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된다.

이렇듯 오남용이 문제되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의 무분별한 고(高)카페인 음료 섭취를 예방하고 안전한 카페인 섭취를 알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더불어 고(高)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2013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런 카페인의 오남용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많은 우려와 경고가 있었음에도 지난해 카페인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슈퍼판매가 이루어지고, 외국의 고카페인 함유 드링크가 수입 허용되면서 카페인의 과잉 섭취 기회는 많아졌다.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서 끝나지 않고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高)카페인 음료 섭취를 막기 위해 올바른 정보제공을 넘어서 음료업체의 과도한 광고 제한, 학교와 교육당국에서의 교육과 홍보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 5월 14일

## 건약 상반기 활동 2 상반기 활동소개

### 건약과 함께하는 1박 2일 약사진보포럼

약사진보포럼이 3월10일(토)~11일(일), 1박2일에 걸쳐 서울 여성 프라자 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진행되었던 신입약사들을 위한 ‘새내기 약사교실’이 주중에 진행되어 지방에서의 참여가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여 숙박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포럼 첫째날, 시사평론가 김종배 님의 ‘이탈남이 말하는 2012 & 2013’, 정혜주 고려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보건의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강의를 있었다.



첫날 강의를 끝난 후 유난히 참여가 많았던 전약협 학생들과 건약 회원들이 함께 하는 뒤풀이가 이어졌다.

둘째 날은 천문호 건약 전회장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등 약계 현안에 대한 강연에 이어, 좌담 형식으로 바람직한 약사상과 역할에 대해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내년에는 더 나은 약사 진보 포럼을 기대해 본다.



## [3월 월레포럼] 핵 안보 정상회의의 의미, 핵을 넘어서는 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3월 월레포럼

핵 안보 정상회의의 의미, 핵을 넘어서는 대안

- 장호종 (민주주의실천의사협의회, Left21 기자)



2011년 3월 11일(금) 오후 2시 46분

일본 후쿠시마에 규모 9.0 강진 발생

후쿠시마현의 원전 1-4호기 폭발

After 1yr

2012년 3월 26일 - 27일

제 2차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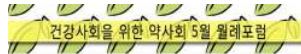
일시: 2012년 3월 23일(금) 늦은 8시 30분

장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당

서울특별시 이화동 20-1 엘림빌딩 3층 (02-523-9732) / [www.pharmacist.or.kr](http://www.pharmacist.or.kr) / @goodpharmacists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2012년 첫 번째 건약 월레포럼은 Left 21 기자이면서 ‘반핵의사회’ 회원인 장호종 선생님의 강연과 이후 건약 회원들 간의 토론이 진행 되었다.

## [5월 월레포럼] 진보와 정치의 불편한 조합에 관하여



진보와 정치의  
불편한 조합에 관하여



\* 진보가 정치를 만날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가

연사: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정치학 박사)

일시: 5월 24일(목) 늦은 8시 30분

장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강당

서울특별시 이화동 20-1 엘림빌딩 3층

문의: 02) 523-9732 [www.pharmacist.or.kr](http://www.pharmacist.or.kr) / @goodpharmacists

\* 자세한 내용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진보와 정치가 만날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였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정치학 박사)를 초대하여 정치학 일반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 포럼 발제문은 건약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 [상반기 전국 회원행사] 괴산 산막이 옛길걷기

여름을 알리는 6 월의 첫 번째 일요일인 6 월 3 일, 2012 년 상반기 회원 전국행사로 충북 괴산 산막이 옛길에 건약 회원 및 식구들과 함께 다녀왔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대전, 대구, 광주, 울산에서 올라온 여러 회원들이 강의실이 아닌 열린 자연 속에서 함께할 수 있어 더욱 좋았다.



## 약사법개정에 따른 변화와 우리의 방향

서경지부 천 문 호

의약품 슈퍼판매가 우여곡절 끝에 허용이 되었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많은 보도가 되어 굳이 개정내용을 반복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우리에게 문제는 의약품 슈퍼판매가 이루어진 배경이 중요한데 약사 사회가 한약분쟁 이후 이렇게 언론에 못매를 맞아가며 몇 개월 동안 신문과(특히 조중동)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요인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편의상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형식상의 구분이지 사실은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정권을 잘못 만나서만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 십 년간 고질적으로 누적된 약사사회의 문제가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슈퍼판매문제는 늘 사회전면에 부상할 것이다.

## 내부적인 요인

### 1.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역할 재정립 실패

의약분업 이전 약사들의 역할은 기형적인 것이었기는 했으나 쉬운 접근성을 바탕으로 경질환에 대한 수요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약분업 후 약사의 역할 재정립에 실패, 현재 대부분의 약사들은 조제서비스에만 치중하고 있다. 조제서비스 범위를 복약지도까지 포함한다면 조제서비스 중 의약품의 조제 및 전달에만 매몰 되어 있다. 이는 약국의 수익 중 평균 70%정도가 처방전 수익에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병·의원 근처로 약국의 분포가 재편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약국은 처방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수용하느냐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처방약 뿐만 아니라 일반약에서도 복약지도라는 요소는 주요한 약사역할로 자리매김 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결정적으로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약사와 소비자의 지식차이를 유발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었고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남기면서 일부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로 나가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 2. 약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비약사 문제

이 문제는 별 말이 필요 없는 문제로 의약품 슈퍼판매가 온 사회적 문제가 되어있는 과정에도 대한약사회장의 약국에는 약사가 없었다(물론 의약품을 비약사가 판매한 그 순간에만 없었을 수도 있지만). 약사가 자기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더 한심한 것은 약국에 약사가 없으므로 그 약국은 슈퍼랑 다른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국민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슈퍼판매에 찬성을 할 수밖에 없다

### 3. 너무나 부실한 복약지도

의약품이 전문가의 손에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의약품 자체가 갖는 위험성(부작용) 때문이다. 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바로 의약품 사용 시점과 사용 후 평가를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복약지도를 명문화하고 있고 처방에 의한 복약지도에 수가를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 정확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들은 약사들의 복약지도에 별로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하며, 하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도 일반 의약품의 경우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전문의약품도 경우의 차이는 있으나 그런 경우가 존재). 따라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약국에서 약을 사먹을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 외부적 요인

### 1. 이명박 정부 들어 더 심해진 규제완화정책

기획재정부는 이미 약국조차도 약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인에 의한 개설을 허용하고자 수 차례의 시도를 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전문의약품 광고허용과 일반 의약품 광고시장 확대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다(의약품 슈퍼판매와 광고 시장 확대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는 이미 영리병원 허용시도와 더불어 갈 곳을 잃고 있는 수많은 ‘부동자본’ 이 새로운 이익확대 장소로 보건의료계를 노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의약품 슈퍼 판매허용은 그런 노력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자본이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여지가 남아있는 이곳에 공세는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이다.

## 2. 심야·공휴일 의료사각지대 개선 실패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위치 변화와 약국 폐문시간이 앞당겨져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은 계속 존재해 왔었다. 그러나 이런 수요를 감당할 곳이 종합병원 응급실 이외에는 없었으며 더구나 응급실에서의 경질환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회 방문에 몇 만원 식의 금전적 부담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수요를 ‘공공적’ 방식으로 미연에 해소 하지 못한 관계로 이런 불편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환자들의 건강 문제를 개인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돈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낮에 아픈 것이나 심야시간에 아픈 것이나 아픈 것은 동일하며 따라서 해결방식도 ‘공공적’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 3. 시민들의 늘어난 의약정보

현대로 오면 점점 전문가가 시민들의 늘어난 지식에 의하여 ‘탈전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이 있다. 아마도 이번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하여 그 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텐데 탈전문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자기건강을 자기가 결정하고 의약사는 이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정보의 ‘질’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보의 질 또한 의·약사 같은 전문가가 판단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의약품 정보의 ‘질’을

저하 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광고이며 광고는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의약품 광고에 나오는 유명인들의 신뢰수준이 약사의 신뢰수준을 부분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 때문이다)

#### 4.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의사권력 독점화 현상

의약품 슈퍼판매와 직접적 이해가 없는 의사들이(사실 외국의 의사들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시 엄청난 반대를 한다. 하물며 슈퍼판매는 말할 것도 없이) 슈퍼판매를 찬성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 아닐까 한다. 의약분업 12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사와 약사간의 협력은 날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으며 이는 의사들이 계속적으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독점적 권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협력과 직능간의 존중이 상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의사협회의 의약품 슈퍼판매주장이 국민들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까?

### 결론

이상의 내/외부적인 요인들은 짧은 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보다 현저히 우세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는 정권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들의 의지에 의하여 정책이 시행된다는 점이 아마도 여러 요인들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적으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한마디에 의하여 정책이 순식간에 바뀌는 이런 정권보다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판단하는 정부가 올 연말에 들어선다면 아마

도 이 문제는 이쯤에서 당분간 휴지기에 들어갈 것이다. 휴지기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이문제일뿐 약사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약사만이 약국을 할 수 있는 문제, 온라인 의약품 판매, 약사수가 문제 등... 이런 문제에 연관되어있는 문제가 바로 위에서 열거한 요인들이다. 의약품 슈퍼판매를 하게 한 요인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약사관련 정책들은 모든 것이 다 활화산이다. 화산이 터져서 지형이 바뀌는 것도 생태계 입장에서는 자연적인 일이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연에 더 좋은 지형이 형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밑에 사는 생물들은 순식간에 멸종을 할 것이다. 과연 약사들은 멸종을 하는 직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비를 잘하여 바뀐 생태계에 잘 적응하는 집단이 될 것인가?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사들이다.



## 사람의 목숨도 돈벌이 수단으로 하자고?

정 형 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최근 서울시 9호선 지하철이 갑자기 50%가 넘는 요금인상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를 한 사건이 있었다. 9호선 지하철을 민영화한 결과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적 지하철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요금 인상을 덜컥 결정한 것이다.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할 때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준 예였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현 정부는 ‘인천공항 민영화’,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돈벌이에 수단으로 전략시킬 ‘영리병원’을 참으로 집요하게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총선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가 발의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시한 상태다.

이미 2002년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이 허용된 순간부터 기업들과 금융자본은 호시탐탐 충분한 이윤이 확보되도록 관계법령을 계속 개정해서 영리병원의 현실화를 추구해 왔다. 이제 10년이 넘으니 지겨울 만도 하건만, 병원을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지칠 줄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들은 영리병원을 집요할 정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걸까?

우선 의료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의료를 영리화하자'는 분'들의 핵심논리는 '의료는 산업이며, 규제를 풀어 투자처로 병원을 활용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같은 애매모호한 말로 포장해도 "누가 돈을 더 버는 정책일까?" 물으면 답은 분명하다. 바로 병원과 투자자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

하지만 의료비는 증가한다. 그런데 이걸 왜 국민들이 찬성해야 하나? 지금도 큰 병이 나면 병원 가기가 무서울 만큼 체감 병원비는 비싸다. 이전에는 경쟁을 하니 '의료비가 싸진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지만, 최근에는 병원비가 싸진다는 이야기까지는 안한다. 하여간 이분들은 세상 모든 것이 돈벌이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도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재벌의 이익 그 중에도 '삼성재벌의 이익'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도 잘 들여다 보면 외국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그 명성도 등이 고려사항에 들어있는데, 이는 송도에 투자컨소시엄을 만든 삼성을 위한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사실 2000년대 초반 영리병원 논란이 시작될 때부터 삼성생명 (민간 의료보험)-삼성병원(영리병원) 모델이 폭로된 바 있고, 최근 들어 삼성이 차세대 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거론한 바도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료의 영리화는 삼성과 현대 양대 재벌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절대' 아니다. 삼성서울병원과 현대아산병원의 경영선진화가 실제로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병상 경쟁', '부세사업 확장', '고가의 건강검진도입'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영리화 과정을 촉발 시켰다. 현재 이들 병원은 하루 외래환자만 1만명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병원이 되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의 법인은 삼성생명 공익재단인데,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삼성생명 주식을 5% 가량 가지고 있다. 즉, 현재 구조에서도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의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삼성이 송도에 영리병원을 짓게 된다면, 이 병원은 공식적으로 병원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삼성의 의료산업 네트워크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확산하려고 할 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결국 '뱀파이어 효과'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즉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올리면서, 다른 병원들도 의료비가 점차 따라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료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영리병원과 연계된 민간보험상품이 나오면서 의료비는 더욱 급증하고, 향후 건강보험 필수가입 등이 와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다. 필수가입이 와해되면 부자들이 먼저 민간보험으로 옮겨 타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쇄적인 흡혈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단순한 단일 병원의 문제일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미국으로 이민 간 노인들이 미국의 의료비 감당 때문에 역이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실제로 미국에 이민간 한국인들이 의료비 등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 병원에 가면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미국은 알다시피 민간의료, 영리병원의 천국이 아닌가? 미국의 영리화된 의료체계가 한국에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준다. 내국인 영리병원의 의료비 증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런 영리병원이 '좋은 점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분

들이 있다.

우선 고용창출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투자가 있으므로 당연히 고용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비영리 병원 등과 비교해 환자대비 의료진의 수 등 모든 부문에서 영리 병원의 고용효과가 낮다. 유일하게 고용율이 높은 부문은 병원 경영진이다. 물론 병원 경영진의 월급도 영리병원이 더 높다. 즉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 보다 고용창출 효과도 낮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뿐이다. 고로 주주들과 일부 경영진에게만 유리하다는 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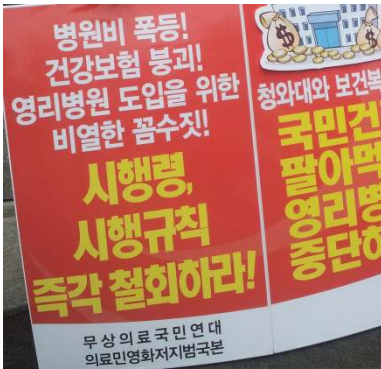
물론 이는 당연한 결과다. 영리병원은 이윤배당이 우선이라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비정규직화 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나마 인력 창출조차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증가이다.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병상당 간호인력 등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대형병원들은 지금도 상당수 의료인력을 외주한 상태이다. 실제 병상당 고용인력이 많고 정규직을 채용하는 곳은 스웨덴처럼 공공병원이 대부분인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병원을 더 설립하거나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이 해법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영리병원은 돈벌이를 위한 것인 만큼 피부, 미용성형 등 돈벌이가 되는 분야의 의료 서비스 질은 상승할 수 있다. 또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패키지는 질이 더 좋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서비스 분야는 정반대다. 미국에서는 영리병원 환자가 비영리병원으로 갔다면 연 1만 4천명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투석환자 같은 만성환자면서 가난한 환자들에 대한 시설과 의료인력 충원에는 인색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무상의료 선진국들이 의료비 지출대비 효과에서 미국 같은 영리병원 천국보다 앞선다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일단 한번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해보고 평가하자는 주장은 어떠한가? 나는 이처럼 무책임한 주장을 본 일이 없다. 의료제도는 한번 잘못 가면 돌려놓기가 어려운 분야라 공공성이 더 강조된다. 그런데 이미 수 많은 연구논문으로 영리병원 문제점이 증명됐음에도 굳이 망가져 봐야 정신차리겠다는 체험 마니아들을 어찌해야 하나. 개인사업이라면 저질러보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한국 의료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과 환자생명을 담보로 한 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이 이미 6군데가 넘고, 내국인 진료가 되므로 사실상 전국 영리병원이다. 더구나 공공의료가 7% 정도인 한국에서 공공의료확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영리병원 한번 경험해보자는 주장은 한국 의료를 도박판으로 보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대다수 의료인들은 돈과 상관 없이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꾼다. 그런데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목적까지 추가하는 영리병원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는가? 한국 의료는 이미 의료인과 환자 신뢰가 어긋나 있다.

이들이 서로 믿고 치료하고 치료받는 사회로 가는 길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이 하고 있는 무상의료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

## 벼랑 끝에 몰린 유럽위기, 시민의 눈으로 보자.

김 병 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bkkim21kr@naver.com](mailto:bkkim21kr@naver.com))

### 그리스 국회 앞에서 울린 은퇴 약사의 총성

2012년 4월 4일 아침 9시,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 건물이 보이는 수백 미터 앞 광장에서 77세의 은퇴한 약사가 자신의 머리에 대고 권총 방아쇠를 당겼다.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그가 광장에서 외쳤던 한 마디는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투 주머니에서 발견된 그의 유서에는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해 지난 35년 동안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연금을 부었는데 정부가 생존에 대한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다.”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구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기 전에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선 이 방법밖에 없다.”

국가채무위기에 몰린 그리스 정부가 무지막지한 연금 삭감과 공무원 해고를 단행하자, 연금 삭감으로 생활 위기에 몰린 전직 약사 노인이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택했던 것이다. 불과 두어 달 전의 일이다. 코스타스 루란토스 약사협회장은 “그는 기품 있는 인물이었다”면서 “그런 사람을 이 지경까지 몰아간 데 대해 누군가는 답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유럽 위기와 그리스 위기

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지난해 언론에 소개된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보자. “그리스는 지난해 최대 공기업 그리스 전력과 피레우스 항구, 엠포리키 은행 등 팔릴만한 정부 재산은 모조리 매물로 내놨다. 국유자산을 매각해 2015년까지 (부채 상환에 쓰일) 500억 유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1월 이동통신 주파수를 3억 800만 유로에 매각한 것을 제외하곤 투자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유서 깊은 고대국가 그리스에 팔리고 있다면서 국가 채무의 늪에 빠진 그리스에 중요 국유자산을 팔아 빚을 갚아야 하는 처참한 현실을 소개한 언론의 보도 일부이다.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에서 국가적 기틀이 어떻게 와해되어가고 있는지를 또한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전설과 신화로 유서 깊어 관광을 해보고 싶은 첫 손에 꼽히는 나라가 지중해의 평온한 그리스 아니었나. 지금은 독일, 프랑스, 영국이 강국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 유럽 문명의 발원지는 그리스가 아니던가. 그런데 국민소득 3만 달러의 1천만 국민이 평화롭게 살고만 있을 것 같았던 그리스에 연일 세계 언론의 머리기사에 오르고 있다. 전설과 신화 때문이 아니고 관광명소 때문도 아니며 치욕스럽게도 국가 부도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외국에 진 빚을 못 갚고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 돈을 빌려준 프랑스, 독일, 미국 은행 등이 부실에 빠지고, 처지가 비슷한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으로 사태가 번지면서 또 다시 세계

가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금 그리스는 유로 통화동맹을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를 다시 촉발시킬 시킬지도 모를 시한폭탄으로 간주되고 있다. 3만 달러 국민 소득을 이룬 유럽 문명 발원 국가가 졸지에 서구가 멸시해왔던 아시아나 남미의 부실국가 취급을 받게 된 것이고 그 나라에 사는 그리스 국민은 후진국 국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 **그리스의 위기는 진정 그리스인의 책임인가.**

현재 막대한 해외채무를 지고 있는 그리스는 채권자들인 프랑스, 독일 등의 민간은행들 부실을 막는 다는 명분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로재정안정기금(EFSF)이 돈을 빌려줘서 빚을 갚게 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제 금융인데 그 조건으로 대신 그리스에게는 공무원도 대폭 실업자로 만들고 서민 사회복지 지출도 줄이고, 임금도 깎으라는 요구를 하고 이를 안 지키면 더 돈을 빌려 주지 않겠다고 위협한다. 심지어 그리스는 빚을 갚기 위해 국가 재산을 약 500억 유로 규모를 팔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다. 우리 돈으로 70조 가량 되는데, 인천국제 공항 규모의 공공자산을 10개쯤 팔아야 될 지경이다. 도대체 그리스 국민들이 뭘 잘 못했기에 이렇게 가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언론 보도의 어디에도 그리스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없다. 오직 그리스 국가 부도가 현실화 될 경우 채권자들이 입을 손실과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혼란에 대한 우려뿐이다. 이름 있는 전문가나 정치가들도 그리스 국민의安危 따위는 관심 없고 마치 부실한 기업 처리하듯 쉽게 다룬다. 심지어 우리 정부나 보수 세력들은 그리스가 그 동안 과도한 복지지출로 재정을 허술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나라가 결판났다고 비판하고, 우



리는 ‘복지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럴 듯한 교훈을 도출하는 모습조차 보인다.

그런데 정말 지금의 국가파산 사태는 그리스 국민이 그 동안 나라 재정으로 안일하게 사회복지를 누린 자업자득 일까? 객관적 통계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빠졌다고 하지만,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만 해도 재정적자가 GDP대비 5%를 넘지 않다가 3년 만에 두 배가 뛰었다. 국가채무도 100%에서 160%로 뛰었다. 평균 4%정도는 성장했었는데 지난해에 정반대로 -6.5%로 추락했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그리스 국민이 일으켰는가? 아니다. 바로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미국과 유럽 강국들의 민간 은행들이 저지른 범죄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 채권을 회수하겠다면서 그리스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우리나라도 1997년 끔찍했던 외환위기 경험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은 후, 금반지를 모아도 부족해서 공기업과 은행들을 해외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외자 유치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를 겪었다.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월급이 깎여 나가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다. 재정위기라기 보다는 대외채무상환 위기에 걸린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환율을 절하시키고 대외여건의 호조건을 타 수출을 급격히 늘림으로써 일단 채무 위기로부터는 벗어났다.

그러나 그리스는 사정이 다르다.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쓸 수가 없다. 자국의 독자적 통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유로 통화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다.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그러면 수출을 늘려 경상수지를 흑자로 반전시켜 빚을 갚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구제 금융의 대가로 강요당한 긴축정책은 경기침체를 더 가속화 시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점점 빛을 갚을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 남유럽 국가들에게 번영의 상징에서 족쇄로 변한 유로 통화 동맹

그러면 남유럽 재정위기가 상황이 거의 막바지까지 온 이 시점에서, 도대체 유로 통화를 왜 탄생시켰고 어떤 구상으로 발전시키려 했기에 오히려 유로가 그리스에게 족쇄가 되었고 지금의 심각한 유로 붕괴위기에 속수무책인가. 1999년 1월 유로 통화가 탄생했을 때만 해도 참가국들은 유로화라고 하는 안정적인 통화를 사용하여 환율 변동성을 줄이고, 역내 환전 거래비용도 절감하고 무엇보다 유로 역내에서의 장벽 없는 시장을 형성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대에 들떴다.

한마디로 역내에서의 활발하고 자유로운 상품의 이동, 자본의 이동, 노동의 이동을 통해 복미 달려 경제권에 맞서는 번영을 누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관세가 없어진 상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 그런데 경쟁력이 있었던 독일의 상품은 자유롭게 남유럽으로 수출되었지만 남유럽의 상품은 독일로 넘어가지 못했다. 상품 수출이 증가한 독일은 생산량을 늘려야 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면 독일의 자본이 낮은 비용을 찾아 남유럽으로 이동하고, 남유럽의 노동은 일거리가 많은 독일로 이동하든지 해야겠지만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독일의 자본은 임금이 더 싼 동유럽으로 이동했고 남유럽의 노동자들은 짐을 싸서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지 못했다. 사람의 생활 터전을 옮기는 노동의 이동이 자본의 이동만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어와 문화와 사회제도가 다른 국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결국 독일, 네덜란드 등 경쟁력이 있는 국가의 수출은 계속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는 쌓였고, 반대로 남유럽 국가들은 적자가 쌓이고 경쟁력은 약화되어왔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가격 경쟁력을 올려야겠지만 유로 통화를 함께 쓰고 있어서 그러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실업이 늘고 소득이 줄기 시작했다. 국내 수요도 줄고 조세 수입도 줄었지만 정부가 재정을 동원하여 경기를 부양하거나 부실은행을 구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조세수입이 줄었으니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여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유럽 국가들은 이미 국내저축이 없어 국내에서 국채를 소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이럴 경우 통상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국채 물량을 받아주겠지만 남유럽의 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이다. 유럽 중앙은행은 회원국 국채매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해버렸다. 남은 방법은 정부의 국채를 외국에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같은 유로를 쓰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은 별 제약 없이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사들일 수가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지만, 동시에 수익률도 좋은 남유럽 국가의 국채를 대거 사들여서 남유럽 국채를 소화해주었다. 이런 식으로 남유럽 국가들은 대외 채무국이 되었고 북유럽 상업 은행들은 채권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자가 늘고 비례해서 대외 국채 발행규모가 커지자, 위험을 느낀 은행들과 투자자들이 남유럽 국채시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이자율은 올라갔다. 끝내

유로 통화권 국제시장에서 추가적인 자금 동원이 어려워지면서 이른바 남유럽 국가부채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유로 통화권 17개 국가가 진정으로 하나의 연방국가라면 이를 테면 서울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 지방 살림을 도와주는 것처럼, 독일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가들이 나서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지원에 들어가고 유로 통화권 전체적으로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해야 마땅하겠지만, 이들 국가들은 여전히 각기 다른 국가들이며 각기 국가적 이익과 실리를 챙기는 관성이 강력하게 남아있다. 지금 남유럽 국가의 지원에 대해 그 동안 유로 혜택을 가장 크게 본 독일이 가장 소극적이다. 그리스 시민들은 “유로화는 유럽국가들의 공동 재산”인데 “현재의 유로화는 마르크화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 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 그리스 시민들의 삶이 있게 하는 해법이 필요

다시 남유럽과 그리스 시민으로 초점을 옮겨보자. 전직 약사의 권총자살을 불러올 만큼 정부가 사회보장을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끔직한 것은 실업이다.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던 2008년 9월까지 그리스 실업률은 7.5%여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여느 유로 존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2월 그리스 실업률은 21.7%로 악화되었다. 청년 실업률은 50%에 육박한다. 경제위기 기간 동안 3배나 악화된 것인데 최근 이렇게 고용상태가 악화된 사례 자체가 없다. 이 짧은 기간 그리스 국민과 노동자들이 겪었을 불안과 공포를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똑 같은 시기 똑 같은 지역의 다른 나라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아이슬란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경제가 파산에 이르면서 가장 먼저 IMF로부터 46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았던 아이슬란드의 경험은 조금 다른 사례를 제공한다. 아이슬란드는 국내총생산(GDP)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부채로 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 은행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는 대신 과감히 파산시키고 강력한 자본통제를 실시했다. 45억 유로에 달하는 영국과 네덜란드 예금(Icesave) 지급을 국민투표로 부결시켜 버렸다.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의 110%를 넘는 부채 부분을 전면 탕감해주는 ‘110%합의’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말하자면 지금 그리스에 대해 구제금융을 해주고 있는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문하는 유형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기본 규칙을 깨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물론 국제 금융시장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고 신용평가는 투기등급으로 추락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 국제 금융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되었을까. 물론 2009년 성장률은 마이너스 6.8%, 2010년에는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1년부터 성장률은 플러스 3.0%로 올라서고 금리와 물가가 안정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시작되고 있다. 올해도 그리스와는 반대로 2.1%의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 실업률은 7% 수준에 멈춰있다.

심지어 지난해 7월에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10억 달러의 채권을 소화했고 8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졸업했으며, 올해 2월에는 신용 등급이 다시 올라가서 투자 적격 등급이 되었다. 신용평가사의 압력과 국제 금융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이슬란드가 채권자들에게 강경하게 대했던 점이 오히려 위기 극복 요인이 되었으며 아일랜드나 그리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로존에 속해 있지 않았던 아이슬란드는 자국 통화인 크로나화를 절반 가까이 평가 절하시켜 무역수지를 흑자로 반전시키고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데 반해,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 통화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정책을 구사하여 경상수지를 반전시킬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그리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유로 존을 떠나는 것이라면서, 자국 통화(드라크마화)로 복귀하고 급격한 통화절하를 통해 조속히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세로 돌려놓으라고 과감히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2001년 아르헨티나가 국가 부도위기에 몰렸을 때에 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블레저는 이런 조언을 했다. "IMF 등이 그리스에 주문하는 긴축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리스가 긴축 안이든 민영화든 구제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이행한다고 해도 2012년 말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 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의 예측대로 되고 있다. 과연 그리스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6.17일 재총선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나라가 있게 하고 그 나라 국민이 살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채권자들과 민간 채권 은행이 손실을 입지 않게 하겠다면서 그 나라 국민을 무한의 고통으로 내몰 수는 없는 것이다. 즉시 채무지불을 상당기간 연장하던지 아니면 탕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 국가의 자금을 그리스 국민과 국민경제를 희생시키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 국민이 살고 국민경제가 회복되어서 몇몇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채권 은행의 부실 우려가 먼저가 아니다. 필요하다면 유로화 탈퇴도 못할 것은 아니다. 살아나고 나서야 유로화던 무엇이던 지킬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스의 한 정치 지도자는 이런 말을 던졌다. “그리스는 하나의 기업체가 아니라, 국민이 존중 받아야 하는 하나의 국가이다”



\* 이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sup>1</sup>

장 호 종  
(반핵의사회)

2011년 3월 11일에 벌어진 후쿠시마 핵발전소<sup>2</sup> 사고는 많은 것을 바꿔놨다.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핵발전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첫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반대여론에 부딪쳐 좌절됐다. <로이터>는 지난해 이후 태양광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한 독일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량이 무려 22기가와트에 달했다고 보도했다.<sup>3</sup>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주말 저녁에

---

<sup>1</sup> 이 글은 <마르크스21> 2011년 여름호에 실린 글을 일부 발췌·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sup>2</sup>한국 정부와 국내 산업계 인사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원자력'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모두 '핵발전', '핵에너지', '핵무기'로 통일한다. 용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최무영 교수가 쓴 '핵을 원자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http://www.left21.com/article/9466)를 참고.

<sup>3</sup> 'Germany sets new solar power record, institute says', Sat, May 26 By Erik Kirschbaum



이는 독일 전체 전기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해 봐도 이는 핵발전소 20여기가 한꺼번에 가동될 때 생산하는 전기량에 맞먹는다. 재생가능에너지로 필요한 전기의 대부분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일본은 사고 이후 핵발전소 가동율이 조금씩 낮아지다가 지난 5월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췄다. 끔찍한 사고를 겪은 일본인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사고로 정지된 핵발전소 외에 정기점검을 위해 일시 정지했던 핵발전소를 재가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랍의 봄이나 유럽의 총파업 투쟁과 견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일본에서 벌어진 반핵 운동은 전체 사회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크게 성장했다. 수십 년 동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었던 장외 집회와 행진이 여러 차례 그것도 수만 명 규모로 벌어졌다.

<마이니치>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춘다면 전력난도 참을 수 있다는 의견이 74%나 됐다. 63%가 핵발전소 재가동에 반대했고 77%는 정부의 판단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물론 지금 일본의 핵발전소 가동 중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본 지배자들은 여전히 제국주의적 야심에서 핵무장을 바라고 있고, 전체 전력 생산의 20%를 넘는 핵발전을 대체할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은 이미 핵무기 수천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해 전력 손실도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는 있을 듯하다. 그럼에도 유가 인상 등 일본 지배자들의 핵발전 재가동 욕구를 자극할 요인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앞날을 낙관 하기만은 어렵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일본의 반핵 운동이 일본 정부에 맞서 얼마나 잘 싸우는지에 미래가 달려 있다.

한편, 이명박은 일본의 핵발전소가 모두 가동을 멈춘 날 신울진 핵발전소 1, 2호기 기공식에 참가해 ‘핵발전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고리 핵발전소에서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도, 이명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간부가 뇌물을 받고 불량 부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폭로돼도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이명박은 지난해 9월 22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여서 안 된다” 하며 ‘화끈하게’ 핵발전 지지를 천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과 이사직을 지낸 강창순, 윤철호를 임명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산업 관련 84개 기업과 단체 등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의 원자력산업계 대표기관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러니 여전히 많은 이들이 대안이 없지 않냐고 묻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동안에도 정부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려면 핵발전을 확대해야 하거나 전기요금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 왔다. 또 당장 핵발전을 멈추려면 경제적 궁핍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안 말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대안 부재론의 핵심논리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름 아닌 ‘경제성’ 논리다. 핵발전 옹호론자들은 핵발전이 다른 모든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장 ‘탈핵’을 선언한 독일과 핵발전 가동이

완전히 멈춘 일본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다. 독일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 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1년 동안 벌인 에너지원별 가격 재조사에서 핵발전이 결코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적이지 않다고 발표했다.<sup>4</sup>

최근 그린피스 한국지부가 발표한 ‘에너지 혁명’ 보고서는 2030년 까지 한국에서 핵발전소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sup>5</sup> 다양한 국내 연구자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sup>6</sup>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값싸게 보이는 것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 때문이다. 어느 나라 정부도 핵발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액수가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sup>7</sup>

미국에서는 프라이스 앤더슨 법에 따라 수십 년 동안 핵산업계에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우려하는 과학자연합’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

---

4 발전단가검증위원회, 「발전비용계산시트」  
(<http://www.npu.go.jp/policy/policy09/archive02.html>).

5에너지[혁명](Energy [R]evolution) 한국판 보고서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ublications/2012/2/energy-revolution-korea/>)

6 <<핵없는 사회를 향한 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 <<탈핵>>(김명진 외, 이매진) 등을 참고하십시오.

7 헬렌 칼디코트, 《원자력은 아니다》, 양문. pp39~62

서를 보면 1960~2008년까지 핵발전예 지급된 각종 보조금이 같은 기간에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가격의 140%에 이른다. 사실상 적자운영이라는 얘기다.<sup>8</sup> 이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에 지급되는 보조금만 따져도 많게는 현재 생산하는 전기 가격의 70~100%에 이른다.

이런 견해는 비단 진보적 연구자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시티은행은 2009년에 ‘새로운 핵발전소 :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새로운 핵발전소 개발업체들은 너무 크고 다양한 위험요소를 감수해야 한다. 최대규모의 공기업들조차 재정적으로 이 위험요소들을 감당할 수 없다” 하고 결론 내렸다.<sup>9</sup> 친기업가 언론인 <포브스>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핵에너지는 킬로와트시당 5.94센트로 일반 화력발전(3.79센트)이나 청정석탄(4.37 센트)보다 비싸다.”<sup>10</sup>

무엇보다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의 폐로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 사고를 대비한 비용 등을 생각하면 핵발전은 결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핵폐기물은 길게는 수십만 년 넘도록 보관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먼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

<sup>8</sup>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Nuclear Power : Still not Viable without Subsidies》, 2011.2.

<sup>9</sup> Chris Williams, ‘The case against nuclear power’, International Socialist Review Issue 77, May-June 2011

<sup>10</sup> <Forbes>(2007.11.26).

## 핵발전 - 대안은 있다

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려면 먼저 낭비되는 전력을 줄여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전기를 아껴 쓰거나 내뺏하라는 게 아니다. 핵심은 산업계의 전력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강력한 누진제가 실시되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실상 역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정용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10년 동안 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제조업의 전력 사용 비중은 52.5%로 같은 기간 동안 5%포인트나 높아졌다. 따라서 동절기 전력 피크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에 있는데도 애꿎은 국민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sup>11</sup>

한국개발연구원이 2010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전력산업 구조 정책방향 연구’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대비 전력사용량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sup>12</sup>

따라서 이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일은 가능하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맞은 미국 정부는 강력한 자동차 연비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10년도 안돼 연비가 두 배 넘게 높아졌다.<sup>13</sup> 일은 이렇게

---

11 이진우, ‘동절기 전력피크, 국민에 애꿎은 화살’, <주간 경향> 909호.

12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p316.

13 물론 이런 기술적 성취가 자동으로 석유 사용을 줄이지는 않았다. 자동차 기업들은 배기가스 규제를 피하려고 트럭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를 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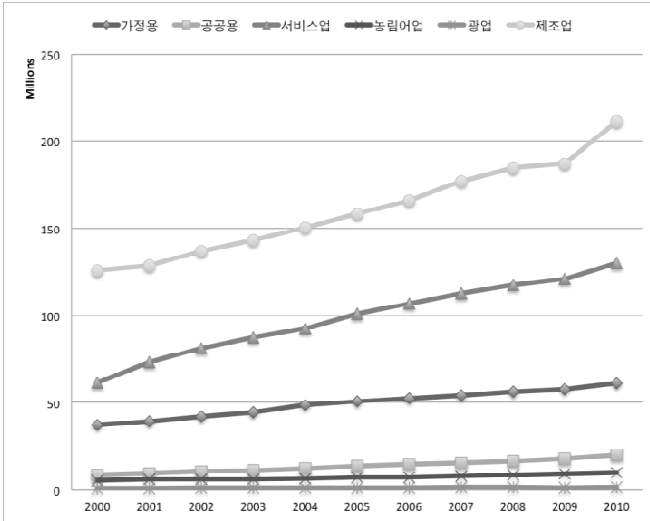


표1 용도별 판매전력량 (출처:KOSIS)

주택과 빌딩의 단열 기준을 대폭 높이고 건설사 들을 규제하면 불필요한 냉난방용 전기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가정용 전력 소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꽂아둘 때 낭비되는 전기를 줄이면 그 중에 1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미 시중에는 이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들이 나와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처

들어 팔기 시작했다. SUV가 유행하게 된 배경이다. 차가 더 크고 무거워졌기 때문에 연비 개선은 상쇄됐고 차 내부에 각종 장치들이 추가되면서 연비는 오히려 낮아졌다. 조너선 닐이 쓴 《기후변화와 자본주의》(책갈피)를 참고하시오.

음부터 달려서 나오기도 한다. 정부가 이런 장치를 건축 규제  
일부로 포함시킨다면 전기 소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수많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단열이 거의 안 되는 집에서 온기를  
유지하려고 불량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이  
사는 집에 단열 공사를 해주면 전력 소비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sup>14</sup> 이런 일을 전국적으로 실행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 다음에 필요한 일은 에너지를 재생  
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화력발전소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예컨대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3을 풍력으로  
전환하려면<sup>15</sup> 연간 24조 원이 필요하다.<sup>16</sup>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

<sup>14</sup> 국내에서는 환경정의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sup>15</sup> 바람이 비교적 풍부한 자원이라는 하지만 풍력 발전기를 아무데나 설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리적 잠재량'을 근거로 삼는다. 도로, 거주  
지, 경사면, 깊은 바다 등이 제외된다. 김종환(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 1) 2009년 7월 미국의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PNAS) vol.106, no.27에 실린 Global potential for wind-generated  
electricity, Xi Lu, Michael B. McElroy, and Juha Kiviluoma 에 따르면 한국에  
서 풍력 발전의 지리적 잠재량은 연간 육상 176TWh, 해상 990TWh이다.
- 2) 2008년 한국태양에너지학회지 Vol.28, No.6에 실린 '남한 풍력자원 잠재  
량의 예비적 산정', 김현구에 따르면 각각 99TWh(육상), 130TWh(해상)이다.
- 3) 둘 사이의 차이는 발전설비 용량과 해상풍력의 한계 수심, 고도 등에서

이런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은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하며 여기에 매년 GDP의 2%를 투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게 20조 원이다. 지금은 그 돈이 4대강, 핵발전소 건설 등 녹색을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중공업 등 국내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이미 미국 등에 풍력발전 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

비롯한다. Xi Lu 등은 발전터빈 용량을 3.6MW(해상), 2.5MW(육상)으로 가정했는데 김현구는 3MW(해상), 2MW(육상)로 가정했다. 터빈의 설치 고도는 각각 100m와 80m였다. 한계 수심은 각각 200미터와 30미터였고 거리는 92.6km와 25km였다.

4)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300TWh는 둘 사이 어디쯤에 있다.

<sup>16</sup> 2009년을 기준으로 간단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총전력생산량은 433TWh(2009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공사)

2) 한국의 풍력발전설비는 351.4MW, 발전량은 685.3GWh다.(2009 신재생 에너지 보급현황, 에너지관리공단)

3) 따라서 433TWh 중에 300TWh를 모두 풍력으로 대체하려면 154GW의 풍력발전설비가 필요하고 10년 동안 매년 15GW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면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다.

4)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미국의 경우 2백40만 원/KW(\$1,915/kw, 2008 Wind Technologies Market Report, US Department of Energy), 유럽의 경우 1백54만~2백10만 원/KW(€1000~1350/kw, The Economics of Wind Energy, 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2009.3.)이다. 한국 대관령 삼양목장의 경우 98MW(2MW 49기) 건설에 1천5백88억 원이 소요됐다.(1백60만 원/KW) 전력 생산량은 244,400MWh.

5) 따라서 연간 필요 재정은  $1,600,000 * 15,000,000 = 24조$  원



해고하고 직장을 폐쇄한 한진중공업을 정부가 인수해 풍력발전 공장으로 전환시키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키고 지구와 인류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sup>17</sup>

핵심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 대형 선박의 스크류와 풍력 터빈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 덴마크의 베스타스는 1970년대에 조선업에서 풍력발전 설비 기업으로 전환했고 독일에서는 풍력발전 기업인 지악-샤프(Siag-Schaaf)가 조선업을 인수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했다.<sup>18</sup>

물론 이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sup>19</sup>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려면 에너지 생산을 분산시켜야 하고 — 이렇게

---

<sup>17</sup> One million Climate Jobs, Jonathan Neale, Campaign against Climate Change, 2009에 따르면 일자리 계산은 아래와 같다.

- 1) 독일은 풍력터빈 수출이 많고 미국은 수입이 많다.
- 2) 2008년에 미국은 8GW의 풍력발전 설비가 추가로 건설됐고 독일은 2GW가 건설됐다.
- 3) 2008년에 미국에서는 풍력 건설 일자리 8만5천 개가 생겼고 독일에는 3만8천 개가 생겼다.
- 5) 둘을 합하면 연간 10GW 설비 추가에 1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 6) 매년 15GW 설비 추가하면 18만 9천 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해상 풍력을 고려해 계산하면 25만 명이 고용될 것이다.

<sup>18</sup> 김현우, '조선업의 풍력산업 전환 가능성 모색', ENERZINE FOCUS 25호 (2011. 4. 6.)

<sup>19</sup> 2050년까지 핵발전을 모두 없애자는 좀더 온건한 대안을 담았지만 마찬가지로 핵발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최근 발표된 바 있다. 박년배, 2011를 참고.

하면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도 줄일 수 있다 —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를 가장 적절한 곳에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민간 기업들에 맡겨 뒀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 수준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세계적 수준에서 보면 기술적 재정적 문제는 오히려 더 간단해진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전기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전 세계 GDP의 1%도 안 된다.<sup>20</sup>

## 핵발전과 자본주의

해결책이 이토록 간단하다면 왜 실제로 추진되지 않는 걸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들은 경제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텐데 말이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는 데 있다. 국민국가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자본가들 사이의 시장 경쟁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 요소다.

모두 일시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약속이 이뤄진다면 모를까 먼저 전환을 시도하는 에너지 기업은 곧바로 엄청난 설비투자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석유 핵발전 설비를 모두 포기하고 말이다. 그 투자가 충분한 이윤으로 회수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적어도 당분간은 기존의 설비를 이용해 이윤을 뽑아내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누릴 것이다.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대주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장기적 투자가 불가능하다. 당장 내년, 혹은 다음 분기에

---

<sup>20</sup> IPCC, 'Special Report Renewable Energy Sources', 2011.5

누가 더 많은 이윤을 냈는지에 따라 기업의 존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달리 실제로는 누가 더 효율적인 기술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이 경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세계 자본주의 경쟁의 정점에는 선진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있다. 이들은 현재의 화석연료 체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쓴다. 핵발전이 투자되는 돈은 최소한 그 건설기간(10년) 동안 그 재원이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하게 막는 잠금 효과를 낸다.

경쟁의 또 다른 측면은 국민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군사적 경쟁이다. 이 경쟁의 정점에는 미국이 있다. 2000년대 내내 중동에 서 미국이 저지른 만행은 이들이 자신들의 패권을 단지 경제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독일 같은 사례는 예외적이다. 그럼에도 독일 지배자들이 진지하게 핵발전을 폐기하려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메르켈 정부는 핵발전소 폐기 선언이 있기 불과 몇 달 전에 수명이 다 된 핵발전소를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겠다고 했다.<sup>21</sup> 이 발표 때문에 많은 독일인들이 분노했고 마침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지며 커다란 시위로 발전한 것이다. 메르켈은 코앞에 닥친 선거 때문에 수명 연장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선거에서 크게 패배했다.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4개의 원자로를 폐기했던 이탈리아는 새로운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고 스웨덴도 30여 년간 이어져 온 신규 원전 중단 결정을 뒤집었다. 핀란드는 현재 건설 중인 1개 외

---

<sup>21</sup> <연합뉴스>(2010.11.2).

에 추가로 2개를 건설키로 했고 영국 연립정부도 원전 건설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원자로 건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경우 23개 원자로를 건설 중인데 1년에 8~9개의 [신규] 원자로를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sup>22</sup>

이런 계획들은 후쿠시마 사고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핵발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제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핵발전과 핵무기 경쟁에 매달리는 이 체제와 지배자들에게 도전하는 노동계급 운동 건설의 과제를 제기한다.

## 한국 반핵 운동의 약점과 과제

일부 생태주의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도 지금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일부 좌파도 이런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조치들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 민주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전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민간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곤 했던 일들을 대부분 피할 수 있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인류 모두가 안전하고

---

<sup>22</sup> 위의 기사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 다른 일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반핵 운동의 주요 과제로 삼으려 한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부 좌파들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주요 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평범한 노동자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면 핵발전소가 필요 없는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 불매 운동으로 삼성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비슷하다.

단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이런 주장은 진정한 대중운동을 건설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일부 활동가들은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한다'며 이런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이는 첫째, 공정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비싼 전기요금과 환경 파괴, 기후 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안은 기껏해야 평범한 노동자들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리시켜 후자에게 죄책감과 책임을 떠안길 뿐이다. 대부분이 후자에 속하므로 목표가 실현될 리도 없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도 어렵게 만든다. 내가 책임의 일부인데 누구에게 뭘 요구할 자격이 있겠는가. 가장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낭비하는 기업들이 전력 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전력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대부분의 환경운동가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방식을 고수하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기업, '시민'이 적어도 환경 문제에서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생각을 받아

들이기 때문이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환경 문제는 사회 ‘정의’ 문제와 별 관계가 없거나 그것을 초월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들은 기업들이 문제인 것은 많지만 기업들이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시민들이 그런 기업을 용인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무절제한 에너지 소비가 지금 같은 에너지 생산 방식을 낳았거나 혹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이 사회에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삶에서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통제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생산을 결정한다는 것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생각이다. 실제로 그런 결정은 모두 한 줌의 중역들이 참가하는 거대 기업의 이사회실에서 내려진다. 정부는 전기를 바람과 빛으로 만들지 핵에너지로 만들지 우리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 핵발전소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사회 정의 문제와 연결시켜야 한다.

둘째, 이런 관점과 실천은 자연스레 대리주의를 강화한다. 개인적 에너지 절약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환경운동가들이 보기에 잘못된 기업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시민 사이에서 다 같이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경제 성장에만 매달리는 정부나 개인적 안락함에만 취해 있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환경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는 환경 단체들의 몫이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때에 따라 투쟁도 하는 것은 환경 단체 활동가들의 몫이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의식 수준이 낮고 에너지 문제에 별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기

도 한 노동자들은 그냥 집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라는 것이다. 정부 관료들이나 기업 담당자들을 만나고 혼치는 않지만 직접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식의 실천은 이런 생각을 강화시킨다.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정부나 기업에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전통적인 방식의 대중운동을 ‘성찰이 없다’는 이유로 폄하하고 별 기대를 걸지 않는 까닭이다. 이는 그들이 대부분의 시기에 엄청난 비관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는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정부 정책이 바뀌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레 발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비관은 다시 그들의 출발점 즉, 환경 문제는 소비자들 탓이라는 생각을 강화한다. 결국 환경을 파괴하는 정부와 기업주들에 대한 증오만큼이나 대중에 대한 불신도 커진다. 그러나 진정으로 대중의 의식이 바뀌려면 소수의 엘리트들이 대중을 대신해 정부와 싸우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 에너지 교육을 받거나 집에서 플러그를 뽑으며 하는 ‘자기 성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들 자신이 직접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노동자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도 변화시킨다.”

셋째, 이런 주장이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중의 무지와 게으름, 욕심을 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이런 주장은 효과적인 자기 방어 수단이 된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 대해 전혀 진지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하는 까닭이다. 대중 행동을 통한 변화라는 전망을 잃은 일부 환경운동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선거를 통한 의회 장악이나 집권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내놓은 대책들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이런 급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짓고 있는 핵발전소들은 민주당 집권 때 승인된 것들이다. 설사 추진하려 한다고 해도 즉각 핵산업계와 거대 석유 기업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핵산업계뿐만 아니라 석유 기업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일이다. 이윤의 핵심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포춘>이 선정하는 세계 10대 기업 안에 석유 기업이 5개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세계 자본주의 전체에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짐작하게 한다.

핵무기 보유에 혈안이 된 우익들도 이런 전환에 저항할 것이다. 핵무기 보유는 이 나라의 거대 자본들이 세계 시장에서 벌이는 치열한 경쟁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주들과 정치인들은 핵발전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 정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운동이 필요하다.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핵 없는 세상’은 한낱 꿈에 머물 수밖에 없다.

## 결론

모든 대중운동이 그렇듯 반핵 운동이 진정한 대중운동으로 성장하려면 첫째, 대중이 그것을 위해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느낄 만한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수준의 요구로는 진정한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많은 핵발전소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라면 도대체 뭐하러 정부의 탄압을 무릅쓰며 행동에 나서겠는가.



둘째, 그것이 실현 가능해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탈핵을 위한 행동 강령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핵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대안은 혁명적 이라기보다는 개혁주의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은 필연적으로 체제 전환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미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국제적 운동에서 이런 슬로건이 채택되고 있다. 반핵 운동은 기후정의 운동처럼 반자본주의·반제국 주의 운동과 결합되어야 한다.

셋째, 거대한 권력과 맞서 승리하려면 반핵 운동은 노동계급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기업과 국가 권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이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노동자들의 행동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8년 전 부안 주민들이 보여 준 저항과 투쟁의 정신을 오늘에 다시 되살려야 한다. 초창기 환경 운동과 반핵 운동이 그렸던 급진적 사회 변화의 전망을 다시 되살려 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노동계급 운동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열쇠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열쇠를 제자리에 꽂아야 할 때다.

\* 이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생협과 약국

대충지부 오 민 우

대전의 민들레 의료생협 옆에서 약국을 개업한지 어언 십 년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지역화폐운동을 하고 있던 대학교 선배의 권유로 의료생협 개원과 함께 약국을 개국하여 벌써 십 년을 해 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민들레 의료생협 제2 진료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옆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충남지부장님이신 김미숙 약사님을 대표약사로 공동체약국 형태의 약국을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료생협이란 무엇이고 그 옆에서 약국을 한다는 것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사회적인 약자들이 공동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공동체 운동이 생활협동조합이라면 의료복지 영역에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추구하는 협동운동이 바로 의료생협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 의료생협의 설명을 참고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의료생협은 내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협동조합 병원입니다.**

지역주민(조합원)이 스스로 힘을 모아 병원과 건강시설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과 함께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조합원이 스스로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합니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예방활동(거리검진, 취약계층 진료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합니다.

## **의료생협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고, 의사결정은 노동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 **의료생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나갑니다.**

환자권리장전을 실천하는 의료기관, 조합원 가족주치의, 의료소외계층지원(지역사회기여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의료소외 계층을 돕는 활동), 조합원 모듬 활동, 조합원 건강교육(건강 실천단, 베이비마사지, 건강강좌 등), 협동경제구축(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화폐, 건강화폐 사용) 등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생협은 소유주가 의료인 개인이 아닌 의료소비자들의 조합이고 1인 1표제의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에 의해 결정된 총회-대의원회-이사회 등의 구조를 가진 민주주의적인 조합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료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의제, 일자리문제, 주거문제, 환경문제, 지역보건, 복지, 교육 등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운동입니다.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생협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생협이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들의 건강의료와 관련하는 생활 속의 문제를 다루고자 조직체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의 활동과 그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임원과 직원, 의사를 비롯한 의료전문가들과의 협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생협법에 근거한 주민의 자주적 협동조직체이다.*

*의료생협의 4가지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건강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단체이다.*
- 나. 예방, 보건, 건강과 이를 보장하는 제도에 충실 한다.*
- 다. 지역주민의 참가를 보장하는 민주적 의료기관을 소유한다.*
- 라. 조합원이 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으로서 '반'조직이 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의료기관이 사유화되어 이윤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것을 막고, 검증되지 못한 의료실험이나 약물 투여, 생명조작 등 반생명적 시술로 인한 인권 침해, 생명경시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 바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이다. (임종한, 의료생협입문 /한국의료생협운동의 현황과 향후 과제 53p, 2005.12)*

의료생협은 근간을 이루고 있고 핵심이 되어야 할 특징은 네번째 '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 조직이란 지역, 취미, 활동 등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의료생협내의 소조직인데 '반'의 활성화가 의료생협을 더욱 생협답게 만들어 주며 그래서 민주적이고 인간적

인 조직이 되느냐의 관건입니다. 의료생협운동을 오래도록 해온 일본의 경우 의료생협의 ‘반’조직이 거미줄처럼 형성되어 있어 의료생협의 규모와 발전의 정도가 ‘반’조직의 활성화와 비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생협은 아직 그 역사가 미미해 외형적으로는 의료기관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를 뒷받침할 ‘반’ 조직은 아직 튼튼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의료소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초기의 의료협동조합은 의료이용의 경제적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공제조합 등의 형식으로 결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조합 방식의 의료협동조합은 이른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에 의해서 그 기능의 대부분이 포섭되기에 이른다. 사회보험형식의 의료보험이나 국가보건의서비스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은 복지국가의 보건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위에서 이를 배경으로 하여 성립한 것이다. 일본의 예가 그러하고, 이러한 일본의 예를 하나의 전형적 예로 삼아 출발한 한국의 의료생협도 그 배경이나 지향하는 바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의료이용에서 제기되는 재정적 문제나 의료공급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여전히 현대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는 강력한 하나의 권력으로 존재하며,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건강과 몸의 주체인 주민을 의료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조직한 자치조직이라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와 관련된 어떤 조직도 이러한 문제들을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실천의 문제로서 끌어 안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의료생협의 존재는 작지만 소중한 것이다.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비롯되어 소박하게나마 새로운 의료의 공공성이 실험되는 장으로서 의료생협의 위상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대응하여 사회적*

*연대를 활성화하고 평등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른바 후기 소비자회에서 점차 재봉건화되어 가는 공공영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명근, 의료생협입문 /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의료생협의 역할 75p)*

결국 의료생협이 민주적인 의료운동을 발전할 수 있을가의 문제는 아직 실험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주민조직화의 정도 혹은 ‘반’의 활성화를 통한 기반으로부터의 활동강화의 문제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협동조합은 지역마다 그 발전의 토대가 다르고 다른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대전 지역의 민들레 의료생협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통화 운동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대전 지역의 의료생협이 생겨난 토양 자체가 지역통화운동인 한발레츠의 회원들간의 의료문제에 대한 토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통화란 가상의 화폐를 만들어 지역의 노동력과 재화를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중앙통화의 지배력으로부터 느슨한 경제체제를 도입하는 일이고 그것은 중앙통화가 가질 수 밖에 없는 교환가치 교환에서 오는 착취를 줄여보는데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차갑고 냉정해 질 수 밖에 없는 경제관계를 좀더 인간적인 거래로 만드는 호혜경제 시작을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발레츠가 있었기에 또한 다른 지역사회의 시민운동단체, 생활협동조합단체 등의 연대가 있었기에 대전지역의 의료생협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의료생협의 출자와 활동가들의 대부분이 바로 그런 단체들의 연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 뜻있는 의료인과 활동가들의 헌신 또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생겨나 의료생협은 다시 지역화폐운동의 가장 큰 거래처로 자리잡게 되고 지역화폐 운동의 중심이자 후원자로 자리잡게 되어 지역화폐운동이 더욱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동을 통해서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대전지역 협동조합과 지역화폐운동의 역사는 실제로 그런 상생의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운동은 의료보장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하고 의료사각지대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모색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의료생활협동조합 운동은 주민의 자발성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그들이 주체가 되어 공공의료의 비효율성과 민간의료의 상품화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치료보다는 보건예방에 중심을 두어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향해 나가는데 목적을 둔 자발적 참여운동인 것이다. (유수현, 의료생협입문/시민참여 의료복지 모델로서 의료생협 81p)*

*전술한 우리 사회의 보건 의료 환경과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의료 생활협동조합의 가치와 필요성은 확고해 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인지 그 이유를 참여 복지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료생활협동조합은 건강의 관리와 예방을 강조하고 만성 질환자와 장애인의 관리와 재활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보건 예방위원을 두어 건강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며, 예방활동과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가정  
까지 방문하여 그들의 의료적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  
스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강조하여 온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이념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생활협동조합은 끊임없는 영리와 이권을 추구하는 다른  
의료기관과는 달리 조합원을 중심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인도적인  
서비스 정신과 지역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헌신적인  
지도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환자들에게 이방인과  
같은 느낌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셋째,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능력을 강화(empowerment)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참여의  
바탕 위에 조직되었으며, 건강관리와 예방활동, 그리고 가정방문을  
통한 왕진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조직이다. 다른 의료조직이 이러  
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기에 투입하여야만 하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지만,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에게 기초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능력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유수현, 의료생활협동조합/시민참여 의료복지 모델로서 의료생활협 83%)

의료생활협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개인과 지역 사회  
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의료생활협의 이런  
목표는 가정의학이나 지역사회의학에서 말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  
로 하는 일차의료의 목표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의료생활협의  
의료활동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일차医료를 충실히 하는 것



이다. (이인동, 의료생협입문/의료생협에서 바라본 지역사회 일차진료 87p)

의료생활협동조합이란 지역 사람들이 각자의 건강, 의료,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으로서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르는 조직이다. 그러므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강과 관련된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그 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 및 실무자와 협력하여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 자치 조직이다.

(김명일, 의료생협입문/ 도시 보건지소와 의료생협 92p)

의료생협을 정의하자면,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의 의료, 건강,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지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를 좀더 들여다보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함께 돌보는 일이 의료생협이 해야 할 역할 중 하나이다. (우세욱, 의료생협입문/협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158p)

의료생협은 사회적인 가능성으로 보건사회운동과 만나는 지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운동이 진보적인 보건의료인이 민중의 건강권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실천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의료생협운동은 민중이 중심에 서서 의료인과의 협동을 통해 민중 스스로 건강한 삶을 형성해가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료생협 옆에서 약국을 하게 된 것은 건약을 가입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대학에서의 인연으로 지역화폐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이 건약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의료생협의 옆에서 약국을 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보건의료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생협의 옆에서 약국을 하는 것의 특징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역화폐운동과의 결합을 통해 약국의 상업적 활동이 인간적인 보건의료활동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합을 통해 한발레츠를 통해 지역주민이 단순히 환자-약사간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로 변화하며, 적극적인 의료소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상담하는 협동과 상담의 관계로 바뀌어 갑니다.

\*약국의 수익의 일부를 공공적인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며 보건사회운동을 꿈꾸고 있는 약사의 현실적인 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실천의 공간은 각각의 약국과 의료생협 운동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 제도상의 문제로 약국을 의료생협의 일부로 운영하는 문제는 힘들지만 약국이 의료생협의 파트너로서 의료생협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다루는 보완적인 활동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보건사회운동의 선전의 공간이 되기도 하며, 대안의학을 다룰 수 있는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 채식을 통한 건강관리의 문제를 의료생협 조합원 모임에서 강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실천단”이라는 주기적인 활동을 통해 조합의 발전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운동의 중심에 약국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약사의 지역 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2진료소 개원 시에 공동체약국 '희망약국'의 개국을 동시에 한 예에서,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활동공간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지 옆에서 개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보건의료운동의 협동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대와 협동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들레 제2진료소와 희망약국은 개원 2개월째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운동가들과 지역주민, 협동조합과 사회운동 단체들의 연대의 문제로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의료생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약의 회원들이 의료생협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보건의료 운동과 의료생협운동의 접점으로 약국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더 나은 약국 모델을 구축하고 보건의료운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희망을 찾기를 바랍니다.

## 12기 신입집행부 인사



### 부회장 정 동 만

안녕하세요?

건약 12기 부회장을 맡게 된 정동만입니다.

제가 어느덧 건약에 가입하고 활동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의약품을 둘러싼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문제는 10년 전에 비해 제도적이나 환경적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건약은 진보적인 약사들의 운동단체로써 의약품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쉼 없이 벌여 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약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지지와 활동을 함께해 준 회원들의 공입니다.

앞으로 건약은 그동안 가져온 사회적 역할을 약사 자신의 전문성과 결합하여 제도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더욱 구체적인 운동인 “새로운 약국 만들기 운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현장에서 노력해 온 회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생산하고 실천하는 진보적인 건약으로 발전하는 데 저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 부회장 리 병 도

이번에 부회장을 맡은 리병도입니다.

5~6 월은 이름없는 풀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앞다투어 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름없는 풀 나무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 문을 나가자마자 아파트 입구에 수수꽃다리가 있더군요. 옆에는 산사나무.

잠실야구장 옆에는 산딸나무가 서어나무가. 차들이 썽썽 달리는 길  
가 버스정류장 옆에 메꽃, 지칭개, 썸바귀, 별꽃, 냉이 어디서 날아  
왔는지 페튜니아에 작지만 너무 이쁜 봄맞이꽃까지.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일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건약이길 바랍니다.



## 광주전남 지부

1월 15일, 광전건약 총회가 개최되었다. 3월에는 총 4회 걸쳐 신입약사교실을 진행하였고 10명 정도의 신입약사가 참여하였다. 조직국 사업으로 현재까지 영화보기 2회, 월례강좌 2회를 진행했다. 5월 13일 광전건약 봄 야유회를 진도로 회원가족 50여명이 즐겁게 다녀왔다.

광전건약의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였다.

조직체계변화로 광주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주로 하는 부서로 보건의료사업국을 신설하였다. 지역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방문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지역선정, 방문내용 및 교육내용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방문사업은 첫 방문 후 2주에 한 번씩 3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며 방문회차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1회 방문 : 간단한 건강실태 설문조사, 가정상비약 정리, 복용하는 약 복약지도
- 2회 방문 : 부족한 가정상비약 제공, 건강상담 및 노인 약물안전 교육
- 3회 방문 : 가정내 영양 점검 및 뒷풀이

지역 연대사업으로는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의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월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1개월동안 진행하였다. 틱움키움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자매결연약국 2곳을 확대하고, 지역 아동센터에 봄철 구충제를 보급하였다. 5월에는 5.18추모콘서트에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했다.

## 대충지부

총회이후 월1회(셋째주 금요일) 월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4월에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치험례를 서로 공유하였다. 5월 월례회에서는 대전보건의료연대회의 포럼 주제인 "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한 발표 내용의 공유 및 토론이 있었다.

5월 17일, 대전 보건의료인연대회의 5월 포럼에 김 연희 회원이 참여, 발제를 하였다. 보건의료인들조차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건약 더 나아가 약사 사회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6월에는 6.10항쟁 25주년 행사에 참여단체로 참가했으나 지역 행사 참여 인원 자체가 저조하였다.

현재까지는 일상적인 활동은 없는 상태로 각자 희망진료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월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 울산지부

울산지부는 늦은감이 있지만 6월 20일에 총회를 하기로 하고, 지부 운영위를 구성하였다.

울산이주민센터 내에 내과 진료팀에 약사팀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3월과 5월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울산건강연대에서 진행한 '울산형 공공병원'설립을 위한 정당초청토론회, 이상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초청간담회에 참가하였다. 7월초에는 탈핵 관련한 강연회를 건치, 평화와건강을생각하는의사회와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 신입회원 10問 10答

- 1) 이름 삼행시
- 2) 현재 하는 일, 지역
- 3) 자기 자랑 3가지
- 4) 자신의 보물 1호
- 5)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와 그 이유
- 6) 좌우명
- 7)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 8) 요즘 고민은 무엇
- 9) 건약 가입동기 및 하고 싶은 활동
- 10) 건약(회원들)에 하고 싶은 말

## \* 이 수정 회원

1) 이 : 이번에 가입한 이수정 입니다.

수 : 수수팔떡이라도 돌려야 할 텐데, 회지로나마

정 : 정다운(!) 인사 드립니다.

2) 서울대학병원 정문쪽 문전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 - 소소한 것을 좋아합니다.

- 의식주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 체구가 작아서 KTX나 저가항공을 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4) 최근 몇 년간의 사진과 좋아하는 영상들이 담긴 외장하드

5) ‘안경’이라는 영화입니다. 일본영화인데, 지루하다는 사람도 많지만 보고 있으면 평화로워지고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배경지인 오키나와 요론섬에 가보고 싶습니다.

6) 인생 별거 없다.

7) 신뢰가 아닐까 합니다.

신뢰의 부재에서 관계의 틈이 생기니까요. ‘저 사람 참 믿을만 하다.’는 말처럼 듣기 어렵고, 듣고 싶은 칭찬도 없는 것 같아요.

8) 졸업하고 몇 년 째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의 약국에서 비전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생 근무약사로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개국만이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오던 약사의 상과 현실의 모습이 점점 괴리되고, 일상에

파문히면서 그 괴리감조차 익숙해지는 것이 답답한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근무약사들이 가지고 있을 고민일 것 같은데요.. 너무  
우울한 얘기였나요.

사소한 고민으론, 요즘 당분에 중독되는 느낌이에요.. ^^:

9) 건약은 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 이런저런 행사에서 건약 선배님 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  
는데, 저도 나중에 약사가 되어서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10)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 송 해 진 회원

1) 송 : 송파구에서

해 : 해지는 저녁

진 : 진한 설렁탕 같이 먹어요~

2) 개국약사 서울시 송파구

3) 나에 대해 관대해요~<타인에겐 글썽요 ^^>

한해 평균 오분 이상 두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깊은 잠을 편안히 길게 즐겁게 잘 수 있는 능력

4) 엄마

5) 크로싱

좋아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봐왔었던 수많은 영화 중 가장 마음이 아팠었던 영화

6) 나의 행복이 내 아이들의 행복을 좌우 한다

7) 공감

8) 운전면허를 딸까 말까..

9) 학창시절 티브이에서 약물 오남용 관련하여 건약회원 약사님들의 인터뷰를 몇 차례 보게 된 후부터 관심이 있었답니다

10)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새로운 시작

서경지부 신 주 영

안녕하세요?

신입회원 소개 이후로 건약 회원님들에게 지면에서 처음 인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으로 가입한 신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2일 이후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DUR정보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약청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만을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조직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의약품 시판 후 부작용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약물과 부작용간의 인과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 약물 적정사용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게 된 DUR정보팀에서는 병용금지, 연령금지, 임부금지 등 약물 적정사용기준을 개발하고, 심평원 청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노인, 소아, 임부 등 특정 환자군 혹은 비만약물이나 항정신성 약물 등 특정약물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관이 출범하게 된 업무 초창기라 여러 가지 업무의 SOP 개발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학대학 재학 중 신약개발이나 자연과학 쪽 분야보다는 약국에서 실제로 의약품이 사용되는 모습과 약사의 사회적 역할 등에 더 관심을 두게 되어 보건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의약품을 연구하기 위한 학문적인 기반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인구집단에서 약물사용양상과 부작용간의 관련성을 구명하는 학문인 약물역학(Pharmaco-epidemiology)을 박사과정 전공으로 선택하여 현재까지 공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가 약사로서 나아가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여기까지 흘러 오게 되었고, 새로 시작하게 된 기관에서 약사로서, 약물역학 연구자로서, 그리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회원으로서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을 읽고서

서경지부 송 해 진



얼마 전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바로 구매하여 약국에 비치 해두었더니 환자들이 조제 중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유심히 읽어보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때론 질문까지 종종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동안 약국에서 해왔었던 복약 지도를 포함한 환자와의 의사소통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을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상시 국민들이 병원에서 약국 그리고 가정까지의 그 일련의 치료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의문점이나 잘못된 상식,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하여 환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니 환자들에게 도움은 물론이고 저자와 같은 약사인 제 입장에서라도 기분 좋은 책이었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 만성질환자는 매해 늘어나고 있고 소득 수준의 증가로 인해 과거 십 여 년 전에는 없었던 ‘웰빙’이라는 단

어도 등장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사들도 그에 걸맞은 변화와 행동이 있어야 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의약분업을 전후로 약국 특히 약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전과는 많이 변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약사상은 무엇 인지 아직은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사란 약의 대한 전문가란 대전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 년 전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에서 근무했던 첫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 약국에서 이뤄지는 약사들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선 그 당시 커리큘럼 상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기도 했었고 또 공부를 소홀히 한 불량 약대생이기도 한 덕에 환자도 전산직원도 동료약사도 얼마나 두렵던지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까지 들었었습니다.

졸업 후 구석에 처박아놓은 전공 책들을 다시 꺼내 들고 도움이 될만한 강의는 무엇이 있나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국 안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업무의 내용이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초보 약사 시절 그리 많이 당황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약의 전문가로서의 인식을 좀 더 정확히 심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약사란 단순히 처방전에 쓰여진 약을 건네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건강지킴이로서의 적극적 역할로의 변화가 이미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고 이 책 또한 이러한 노력의 한 성과라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비롯하여 조제료 등 수가문제, 또 최근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까지 약사들에게 골치 아픈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의 어려움에 밀려 우리 약사들의 미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몸은 온종일 약국 안에 있더라도 생각만큼은 폭넓게 열어 두고 약의 전문가로서 현재보다 더 체계적인 보다 더 전문적인 약국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약사들이 함께 노력할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을 쓰신 약사들에게 감사의 뜻 전하고 싶습니다.

##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

울산지부 김 미 영

육식동물인 사자는 초식동물인 소를 이해  
할까요?

미끈한 개구리는 보실보실한 고양이를  
이해 할까요?

소나무의 푸른 잎은 단풍의 변화를 이해  
할까요?

동풍은 북풍을 이해할까요?

'너를 이해는 한단다

아저씨도 어려서는 그랬어

하지만 물건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단다

엄마한테 주라고 해 알았지?'

아이는 고개를 주억거리며 '엄마 백원만 엄마 나 천원만...'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고 아이는 이런 피상적 이해가 판치는 현실로  
나왔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철학과 심리학, 방송에서 공감과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이론에 관해 설명하느라 술한 지면과 시간을 씁니다

일견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때론 갸웃거리게도 하는 논리들 사이로 헤매노라면 '이해'란 다시 사뭇 떠나면 공간 속을 떠다니는 거품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

이해를 간절히 구하면서도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자기 본위의 폭력적인 이해로 관계를 풀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중요성은 알지만 정작 참된 이해는 알지 못하는...

그 참된 이해를 이 책은 가장 쉽고도 아름답게 풀어냅니다

이해와 그 깊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

향기롭고 달콤한 '위그든씨의 사탕가게' 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 노찾사 콘서트 ‘우리 지금, 여기에’를 다녀와서.

서경지부 김 태 원



4월의 마지막 토요일, 유난히 무더웠던 봄날 오후 무렵이었다. 한 여름에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나'이지만, 이 날은 생과일 주스를 마셨던 날이기도 하다. 이는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콘서트 '우리 지금, 여기에'에 가려고 신촌 기차역에 버스를 내려서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시간이 남았다는 핑계로 대흥동 산동네 골목을 돌고 돌아 콘서트가 열리는 마포아트센터까지 걸어갔기 때문이다.

내가 걸었던 대흥동 골목골목은 평상시 지나다니는 깨끗하고 잘 정돈된 서울의 모습과 달리 재개발 예정지역이었다. 서울은 유난히 산동네가 많고 여전히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예정된 곳들이 많은 동네이다. 우리 건약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이화동도 조금만 올라가도 산동네이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이화동’이란 가사에 보면 ‘서울 하늘 동네 좁은 이화동 골목 길’이란 구절도 있듯이 말이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 한 달여 정도 지낸 적 있었던 부산은 서울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한진중공업이 바라보이는 부산 영도구와 부산 민주공원이 가는 길이 그랬듯이.

각설하고, 프레스시안의 선착순 이벤트에 당첨되어 건약 선배인 명희 선배와 함께 다녀온 노찾사 콘서트 ‘우리 지금, 여기에’,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다. 무대 위의 조명이 밝아지며 8명의 노찾사 멤버들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워지면서 조금씩 내 마음도 설레이고 사랑노래와 달리 민중가요를 들을 때면 나타나는 미세한 떨림 같은 비장감이 들었다

내게 노찾사에 대한 기억에는 작은 단상들이 있다 중학생 때 형 방에 있었던 노찾사 앨범과 친구 집에 놀러가 친구의 고등학생 누나 방에서 빌려온



새로운 노찾사 앨범들을(93년 이었다) 들었던 기억, 바닷가에 놀러가서 불렀던 광야에서(아마도 가사 전체를 외우는 노래가 이 노래뿐이었을 것이다). 추운 겨울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서 들었던 ‘동물의 왕국’, 대학 1학년 때 총학생회 출범식 때 율동 한다고 배웠던 ‘선언’, 아는 선배가 노래방에서 불렀던 ‘그날이 오면’, 군대에서 MC스나이퍼와 거북이를 통해 다시 듣게 된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와 ‘사계’. 이전 회사에서 야근할 때 부서 이사

님께서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를 흥얼거리서 놀래고 이사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던 작고 소소한 기억까지도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 때 네이버에서 노찾사 콘서트에 꼭 가야만 하는 사연을 올려 초대권을 준 적 있었는데 그 당시 당첨이 되어 좋아했다가 동창 결혼식으로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 아마 사회인이 되기에 앞서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노찾사 공연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사연을 올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2005년 20대 때 가고 싶었던 마음과 어느새 30대가 된 2012년에 노찾사 공연에 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싶다. 7년이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대학 4학년 때와 졸업한지 사회인 7년 차인 지금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노찾사 멤버들의 노래와 40대 주부와 일반 회사원이 된 멤버, 교수가 된 멤버, 다시 가수를 꿈꾸는 여전히 노래를 업으로 하는 멤버, 세상이 바뀔 때까지 좌파 판따라가 되겠다는 멤버 들... 그들의 살아온 이야기와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의 40대는 어떨까 싶었다. 나는 잘 살고 잘 살 수 있는 걸까. 잘 하고 잘 하고 있는 걸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문득 우리 건약에서 20년이 지난 2012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배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들의 힘은 무엇일까? 지칠 법도 한데 여전히 그들을 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 일까?

이번 노찾사 콘서트는 흔히 떼거리로(대개의 노래패들이 그러

하듯이) 부르는 노래와 각자 멤버들의 각자의 노래로(노찾사 노래도 있었고,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등 각자가 들려주고,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곤 함)구성되어 있었는데, 여러 노래 중 마음에 와 닿았던 가사는 다시 가수를 꿈꾸는 멤버 유연이가 불렀던 '인당수 (주연수 작사, 송석진 작곡)'의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는 구절이었다. 여러 번 반복되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란 가사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다시 꿈꾸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콘서트를 보러 온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소중한 것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고, 놓치지 말라는 간절한 외침이 아닐까 싶었다.



각자의 독창이 끝나고 다시 함께 모여 불렀던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동지를 위하여', '광야에서'는 여전히 큰 울림이 있었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끝으로 김병학 선배님과 닮아 보였던 40대 회사원인 맴버 박종홍이 단아하지만 힘차게 불렀던 '이 세상에'(함영국 작사, 작곡)는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마치 모꼬지나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진지하게 혹은 숙연하게 하는 노래 라는, 언젠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 이 가사로 노찾사 콘서트 후기를 끝맺고자 한다.

< 이 세상에 >

겨레의 노래1 앨범(2006) 수록곡

“이 세상에서 잊혀져 간 삶들을 그대는 알 수 없다 하여도  
세월에 가리워져 죽음 같은 어둠에 묻혀 있어도

고요히 펼친 세상과 송고한 우리 산천과  
영원히 같이 할 나의 꿈이여, 우리의 기쁨들이여

들녘에 핀 꽃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저 하늘 저 끝에 우리와 같이할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들

이 세상에 어딘가에 내가 찾고 싶은 그것이 있고  
멀어져 간 모든 사람을 작은 아픔으로 느끼리

떠나는 길 멀고 멀다 하여도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이요  
쓰러져 지쳐도 아픔 속에 눈물이 흘러내려도

들녘에 핀 꽃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과  
저 하늘 저 끝에 우리와 같이할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들

이 세상에 어딘가에 내가 찾고 싶은 그것이 있고  
멀어져 간 모든 사람을 작은 아픔으로 느끼리

작은 아픔으로 느끼리

\* 노찾사 공연을 초대권으로 다녀왔는데, 앞으로는 우리들의 노래를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부르는 가수들의 콘서트에는 앞으로 제돈 주고 가야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 건약

2012년 여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약 SNS (페이스북 & 트위터) 광고

### 1. 건약과 페이스북 친구가 되어주세요~

- 페이스북에서 '건약'이라고 검색해주세요.
- 건약에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 2, 건약과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으면 건약 그룹에 가입해주세요~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그룹'은 건약 활동과 회원간의 일상들을 서로 알아가는데 마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그룹 가입은 건약 그룹 회원의 초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건약 담벼락에 초대를 요청해주세요~
- 때로는 관리자가 초대하여 자동으로 가입이 될 수도 있어요.



### 3. 건약 트위터를 팔로잉해주세요~

- id : @goodpharmacists

### 4, 회원 분들의 트위터 주소를 알려주세요~

- 건약 페이스북 담벼락 또는 건약누리집에 올려주세요 ^^

## 광 고

### 남해 흙집 누구나 이용하세요~

경남 남해에 있는 하성주 회원의 흙집입니다.  
언제라도 건약 회원들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흙과 나무 돌과 숯으로만 지은 집입니다.  
열쇠도 대문도 없는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열심히 일한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1. 이용 방법 : 하성주 회원에게 연락 (010-2852-9752)
2. 찾아가는 길 :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648
  - 남해읍에서 이동면 소재지 방향 (여기까지 포장도로임)
  - '석평리'라고 써있는 작은 길로 우회전(시멘트 포장길)
  - 첫번째 나오는 작은 골목길로 우회전 후 50미터 간 후
  - 멀리 교회가 보이면 다리 건너지 말고 우회전
  - 작은 삼거리에서 마을회관 쪽으로 직진하면 보입니다.

찾기 어려우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blog.daum.net/rheepyengdo/?t\\_nil\\_login=myblog](http://blog.daum.net/rheepyengdo/?t_nil_login=myblog)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발행인** 신형근  
**발행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6-1 엘림빌딩 3층  
**전 화** 02-523-9752      팩 스 02-766-6025  
**e-mail** [kpky@chol.com](mailto:kpky@chol.com)  
**홈페이지** <http://www.pharmacist.or.kr>